

주요 정책의 쟁점

(1997. 3. 21~4. 21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궁 의견	보완 의견
3.21	새경제팀 경제 대책	· 물가·고용 안정 속의 산업 구조 개편	·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보다 경제 체질 강화에 주력	· 연쇄 부도로 인한 금융계와 기업들의 불안 심리 제거할 수 있는 단기 처방없어 실망
3.27	공기업 민영화 대책	·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통신 등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 주식 소유 제한과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	· 취약한 증시 여건이 완전한 민영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	· 책임 경영은 주인있는 실질적 민영화를 통해서만 확립
3.28	금융실명제 보완 논쟁	· 금융실명제 골격을 유지하되 지하자금의 산업 자금을 위한 부분 수정 필요	· 사채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금 출처의 조사를 면제하는 유인책이 필요	· 투명·건전한 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를 차단하는 실명제 강화가 필요
4.1	새경제팀 단기경제 회생 정책	·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외자 도입기회 확대	· 대기업의 투자 의욕 되살리기와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	· 외채 증가 및 통화 팽창에 따른 물가 부담 등 부작용 우려
4.9	시중 유동성 부족 문제	·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통화지표를 기존의 M2 중심에서 MCT로 전환하면서, 두 지표간에 상반된 추세가 나타나 적정 통화 수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	· MCT(M2+CD+신탁)에 근거하여 시중에 돈이 모자란다고 주장	· 통화 당국에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해볼 때,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
4.15	중앙은행의 독립 문제	· 금융개혁위원회는 2단계 추진 과제로 중앙은행 독립 문제를 선정	· 중앙은행에 자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부여함으로써, 통화 가치 및 물가 안정에 기여	· 재정 정책과 조화없이 통화 가치 안정은 공론에 불과
4.17	환경지자체 의 도입	·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(1997~2001년)의 일환으로 환경 정책 및 관리 업무를 지자체에 대폭 이양	· 지자체의 환경 관리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환경 문제에 효율적 대처 가능	· 지역 개발 사업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로 환경 분쟁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시기상조임
4.18	정부, 고속 철도 부실시 공 대책 발표	·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과 추가 소요 비용은 시공 업체가 부담토록할 계획	· 정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시공 능력 및 시공 기술 능력 부족이 원인	· 시공사들은 설계 및 감리 부실에다가 정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
4.21	부도방지 협약의 발효	·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 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채권 행사를 유예	· 불황, 수출 부진 그리고 한보, 삼미 등 대기업 도산이 잇따르는 경제 위기의 극복에 필요	· 금융권의 여신 회수 가속화로 부실 징후 기업의 부도를 앞당기는 부작용 초래